

# “예산편성 할때부터 주민과 함께”

## 전국 지자체 ·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바람 국회에서도 의무화 … “주민감시·독려가 필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자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 참여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공약시키기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조화한 민원들이 높은 지자체도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민선5기 ‘참여예산제’가 대세 = 지난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에 후·2·2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민선5기가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광주도에는 수원시가 조례 개정 및 관련규칙 제정에 착수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구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 예산낭비신고센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등포수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산하여 예산운용 투명성과 효율성

성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규칙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천, 오산, 양평 등 경기도내 10여곳에서 참여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와 남양주도 참여예산제 도입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8월까지 2011년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개최, 결과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참여예산제를 포괄해 각종 시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주요 정책사업 토론 · 공청회 등 △요구 예산예산제 운영 △위원회 자료 및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춘남도를 비롯해 강원 평창군, 경북 칠곡군 등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참여예산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참여예산

제를 도입한데 이어 강원교육청도 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교육재정의 투명성 ·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1년 상반기 중 관련조례 제정 등 참여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이행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 = 이처럼 참여예산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토록 했다. 현재 전국244개 지자체 중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99곳

전국 지자체 참여예산조례 제정현황(2010.6.6)

광역시	지자체예산수(안건/예산액)	교육청예산수(안건/예산액)	지자체예산수	지자체사업명
서울	26	0/0		태릉구 태릉대교
부산	17	2/1.8		
대구	9	6/66.7		남구 달서구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11	0/0		
광주	6	5/83.3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6	3/56.9		분천 대덕구 중구
충청	6	2/33.3		동구 서구
강원	19	8/42.1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강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	32	13/40.6		과천시 광주시 용인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당포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화성시
충북	13	9/69.2		단양군 충주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증산군 보은군
전북	15	8/53.3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전남	23	22/95.7		광진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장흥군 장수군 영광군 해남군 해운군
경북	24	7/29.2		경주시 상주시 영덕군 영천시 봉곡군 영도군 영천군
경남	21	10/47.6		문성 거제시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함창군 함안군

자료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에 달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례회 등 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주 북구 · 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 북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광영 합계하는 시민행동 운영원은 “민선5기 때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래 ‘공약이행기’ 수준에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손 놓고 있는 곳이 많다”며 “민선5기에도 참여예산제 공약이 헛고지나 고치지 않으면 주민들의 감시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데프 기자 한국종합lykwa@roal.com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8-05 16:08:23

### 지방의회 보건복지 분야 의정 아카데미 개최연차 지방의원 50명 선착순 모집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이 ‘2010 지방의회 보건복지 분야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할 지방의회의 의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현직 지방의원들에 우수의 경찰등 의원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의정활동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아카데미에는 주한 독일대사관 사회정책참사관이 참석해 독일 지방자치체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중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임기훈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시 행정 전문위원, 유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조규영 서울시의원도 강사로 나선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고만규 서울시의원, 이정민 송파구 의원, 정기명 성남시의원, 조규영 서울시의원이 의정활동용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아카데미 참석자들과 조별토론도 갖는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인권포럼 홈페이지(www.ableforum.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ableforum@hanmail.net) 또는 팩스(02-833-3096)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15만 원인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미나 참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권포럼은 지난 2006년부터 전국 16개 광역, 기초의회의 장애인정책관련 정책과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문의: 전화 02-833-3095, 070-7730-3005 윤석진 사무국장, 이현진 간사

기초의원 연수는 제주도에서 해야겠어?

김천 상주시의회 이어 칠곡군의회도 추진

시민들 "예산 낭비" 비판, 의회 "장소 중요하지 않아"

(칠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내 일부 기초의회가 거액을 들여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예산 낭비 논란이 인 가운데 칠곡군의회도 제주도 연수를 추진해 뒷말을 놓고 있다.

5일 칠곡군의회에 따르면 칠곡군의원 10명 전원은 오는 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한다.

칠곡군의회는 아직 연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6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 하는 연수인 만큼 회의운영기법이나 안건심사기법 등을 중심으로 연수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의원들이 연수한다고 굳이 거액을 들여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연수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천시의회와 상주시의회도 지난달 제주도에서 연수를 진행해 시안단체로부터 세금 낭비란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10명의 군의원이 연수하는 데에 6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따라가는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명이 참가하는 이번 칠곡군의회 연수 예산은 모두 900만원에 이른다.

인근 구미시의회가 단체 연수를 자체적으로 벌였고, 상임위원회를 1박2일 일정으로 다른 지역 의회를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실속있게 연수를 진행한 점과 대조된다.

칠곡군민 장모(52)씨는 "기초의원들은 당선 이후 제주도에서 연수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인 것 같다"며 "10명의 군의원이 가는 데에 6명의 직원이 따라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장소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며 연수 대행업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판단해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동북신문

# 이런 정당인이라면 구민들에게 신뢰 못 받아

지역 신문사가 제일 많이 겪는 일중 하나가 여야정 치인들의 "왜 여야를 구별하느냐?" "여당의 기사는 많이 掲載하고, 야당의 기사는 왜 掲載 안하느냐?" "다른 신문에서는 기사화 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왜 기사화 하느냐?" 또 우리에게는 왜 신문을 안 보내주느냐 차별하는 것이냐" 하는 등 통상적인 야당인사들의 항의성 말들이다.

신문은 일간신문을 비롯하여 주간신문 역시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은 없다. 만약 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독자들을 구별한다면 그 신문은 자질 없는 신문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에 독자를 구별이나 차별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다.

또 누구의 기사는 게재하고 누구의 기사는 게재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알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에 기사의 취재원을 구별하는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을 무시하는 신문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취재원이 있는 한 누구를 믿든하고 취재하는 것이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해낸 신문으로 차별화된 신문이라 할 것이다.

특히 신문이 살아남고 독자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구별해서는 생존할 수 없기에 누구의 기사는 되고 누구의 기사는 안 되는 신문은 무한경쟁시대에 후진적인 신문으로 신문이 생존하고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구별하거나 차별화해서는 자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역 없는 취재 보도만이 신문들이 취할 의무이다.

그런데 무엇이 불만인지 취재도 없으면서 여당의 기사는 자주 게재하고 야당의 기사는 왜 게재 안 해주느냐는 식의 불만은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나 뒤돌아 볼 때 해답이 나오는데도 앞뒤 정황을 자르

고 '왜 우리는' 하면서 차별화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밝힌 것이다 지적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자기 선전시대인데 자기를 먼저 알고 선전해 달라는 것은 자만에 가득 찬 오만의 극치이기에 남을 닮지 말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취재원이 되고 취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발 차별이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야당이 벼슬 인가?" 반문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신문을 안보내주느냐고 항의하거나 보내달라고 당부하여 신문을 우편료를 부담하면서 보내주었을 때 수년이 흘러도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차가증의 최상의 착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신문을 수년간 보내주었는데도 결재하지 않는 것은 야당에게 그런 것인지 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기에 그런 것인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문은 독자들을 최고의 고객으로 알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여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다. 누구누구를 구별할 수 없고 취재원을 차별할 수 없기에 회비가 갈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언론의 사명이기에 묵묵히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원의 차별 없는 취재와 보도를 실행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 갈 것이다.

따라서 여야를 초월해서 올바른 비평과 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보다는 자기를 올바르게 돌아보고 남의 탓 보다는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갖고 국가와 민족, 주민을 위한 정치 철학으로 구민들에게 선택받는 정치인이 되어주기 바란다.